

#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 전주시,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올해부터 180% 이하 가정으로

전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저출생 문제 극복과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난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난임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만 4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80% 이하는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6만9191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7만4163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건소는 또 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신선배아 최대 회 지원 외에도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3회 씩 총 10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항목도 기존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하며,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포함해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라면 정부에서 지정하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연중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5)으로 문의하면 되며 난임 및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정서적·심리적 건강증진, 지지체계 등은 중앙 난임 우울증상담센터(02-2276-227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4일 시청 로비에서 설맞이 전주푸드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 ‘설 명절, 건강한 전주 농·특산물로’

### 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직거래 장터 열어

설을 앞두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푸드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24일 시청로비에서 설맞이 전주푸드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전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배, 사과 등 전주에서 생산된 과일류 등 각종 신선 농산물과 잡곡 선물세트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또, 전북지역 7개 시·군과 제휴한 각종 특산물 선물세트도 함께 진열·판매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는 전주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전주푸드 직매장(송천점, 종합경기장점)을 전주지역 농민들과 전주시민들의 상설 직거래장터 장소로 만들어 매월 시민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제철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지역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완산구, 설 명절 종합대책 과·동장회의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완산구 과·동장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교통 및 청소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신속한 처리체제를 확

립하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설 명

절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설 명절 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장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하고 다양한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동네복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전북경찰, 설 명절 교통체증 대비 특별 근무

### 내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북경찰이 도민이 안전하고 교통 불편 없는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근무를 추진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올해 설 연휴가 주말 포함 5일간으로 짧아 교통체증을 예상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근무는 26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및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장소에 대해 소통위주 집중 관리하고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각 경찰관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고속도로, 국도 등 귀성·귀경길 교통 지체현황을 상황관리 한다.

또한,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상설중대 등 430여명, 순찰차, 경찰오토바이,

헬기 등 160여대를 교통관리에 집중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지체현황 관리는 임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해 난폭운전과 전용차로, 갓길위반 등 정체요인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귀경·귀성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보복운전 등에 대해 단속 한다.

또한, 헬기를 이용해 혼잡지역 정체 해소를 위한 지공(地空)입체 교통관리를 시행해 고속도로 혼잡구간 등을 특별 관리하고, 공영주차, 대형매장, 전통시장, 터미널, 역 등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는 등 소통위주 근무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시군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정구간 정정차를 상시·한시적으로 허용(1.26 ~ 2.6, 12일간)하고, 연휴기간중 정체요인을 사

전 제거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청은 귀성·귀경 차량 운전시 교통량이 많고 막히는 구간에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교통 지체현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 해소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을 활용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특히,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 또는 사망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소중한 내 가족과 운전자 자신을 위해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설 명절은 주말포함 5일간의 연휴로 귀성·귀경일이 짧아 교통량이 집중되어 전반적으로 지체현황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해 이같은 특별 교통근무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강석훈 기자



전주시는 24일 바울교회에서 옹머리 여의주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여의주마을서 자율주택정비 추진

### 전주시,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노후주택이 밀집된 옹머리 여의주마을에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4일 바울교회에서 옹머리 여의주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일합의를 할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건축협정 등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옹머리 여의주마을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감정원 관계자로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내용과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의 기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지원을 맡는다. 용자대상은 사업비, 이주비, 선순위물권해지비로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며, 용자가간은 최장 5년까지다.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 75억원을 투입,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동 15동·17동, 효자동 2동 일부지역을 마을개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조성 스페·공간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송효철 기자

## ‘사범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

### 사법부 역사상 첫 사례... ‘범죄 사실 상당 부분 혐의 소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되며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사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경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교도관을 통해 영장이 집행됐다.

지난 23일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체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과 40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실무진이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 대법원장으로서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에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남은 의혹 및 관련자들에게 대한 수사와 함께 공소장 작성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강석훈 기자

## 여야 4당 ‘양승태 구속, 사법 정의’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사법 정의'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 또 다른 적폐라며 비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이 의미가 아닌 정의를 선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양승태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비롯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시도라면 또 다른 적폐라며 비판했다. /강석훈 기자

/강석훈 기자

## 전주시 용복동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원 고사된 소나무를 정밀 조사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음이 1월 23일 최종 판명됐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176번지로서 전주시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다량이 초기에 발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07년), 순창군(14년), 군산시(15년), 김제시·익산시(16년), 정읍시(17)에 이어 일곱번째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24일 삼천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 시군 등이 모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

았다.

방제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시는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를 3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가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발생병리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에할대책반을 구성해 2월 중순까지 전주시 용복동, 중인동, 김제시 금구면 일원의 산림전체에 대하여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 신고한 사람에게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효철 기자

## ‘형령에 성추행’ 장애인

### 복지시설 대표·아들 불기소

시설 자금을 횡령해 주택을 매입하고 시설 장애인을 상습 폭행과 성추행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와 그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모씨와 아들 B모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모씨는 2017년 7월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운영비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모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어머니 A모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며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전주지검이 인권상담을 위해 시설에 오면서 드러났다.

전주시는 2017년 8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상담을 하던 중 "B모씨가 몸을 만지고 더듬었다"고 털어놓자 시설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B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B모씨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적극 부인했다. /강석훈 기자

## ‘아내가 마약한다며 신고’

### 마약한 40대 구속영장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아내가 마약을 한다. 처벌해 달라"며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다.

조사결과 그의 아내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경찰은 그의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점이 많다"는 진술을 듣고 A모씨에게 소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A모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여객차 발견됐다. /강석훈 기자